

2013 사회적 이슈와 인권

제7주제 **민간인 사찰과 감시받지 않을 권리**

민간인 사찰의 역사와 이유

보안사 민간인 사찰 사건

1990년 보안사령부(현재의 기무사)에 근무하던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의 사찰 대상 민간인 목록이 담긴 디스크를 들고 탈영해 그 목록을 공개한 사건. 이 목록에는 정계와 노동계, 종교계 등에 대한 사찰 기록이 담겨 있었으며, 이 사건을 계기로 보안사는 기무사로 이름이 바뀌고 그 역할이 축소되었다.

사찰 내용

대상자를 A, B, C, D 네 등급으로 나누고 주요활동을 파악하고 있었으며, 사찰 활동을 통해 얻어진 내용을 컴퓨터에 기록.

개인신상카드에는 인적사항, 가족사항, 해외여행 관계, 교우 및 배후 인물 등 9개 항목으로 나뉘어 기록되어 있었으며, 자택의 담장 높이, 비상 탈출구, 예상도주로 및 은신처까지 기록.

민간인 사찰에서 **문제**가 되는 **인권**

1. 감시받지 않을 권리

(1) 소극적인 권리

비밀에 부칠 권리, 정보프라이버시권

(2) 적극적인 권리

개인정보자기결정권

감시의 대상에 따른 세분화

- **주거**의 비밀에 관한 권리
- **통신**의 비밀에 관한 권리
- **사생활**의 비밀에 관한 권리

민간인 사찰에서 **문제**가 되는 **인권**

2. **주거**의 비밀에 관한 권리

헌법 제16조

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.

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.

개인의 생활공간에 대한 감시

(1) 직접적인 침해 형태 - 강제출입

(2) 간접적인 침해 형태 - 도청, 도촬

민간인 사찰에서 **문제**가 되는 **인권**

3. **통신**의 비밀에 관한 권리

헌법 제18조

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.

통신활동에 대한 감시

(1) 은밀하고 치밀하게 진행

(2) 주장과 소명의 어려움

민간인 사찰에서 **문제**가 되는 **인권**

3. 통신의 비밀에 관한 권리

통신비밀보호법

→ 통신제한조치 ·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

제5조(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)

① 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 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. (후략)

계속

민간인 사찰에서 **문제**가 되는 **인권**

3. 통신의 비밀에 관한 권리

제7조(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)

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. (후략)

제8조 (긴급통신제한조치)

① 검사,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,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 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급한 상황에 있고 (생략)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.

계속

민간인 사찰에서 **문제**가 되는 **인권**

3. 통신의 비밀에 관한 권리

제13조 (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)

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3조의2 (법원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)

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는 (생략)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3조의4 (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)

①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민간인 사찰에서 **문제**가 되는 **인권**

4. **사생활**의 비밀에 관한 권리

헌법 제17조

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.

(1) 활동에 대한 비밀

대화, 거래, 이동(왕래), 여행, 이사
학문활동, 예술활동, 직업활동 등

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(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)

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.

민간인 사찰에서 **문제**가 되는 **인권**

4.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권리

(2) 개인정보의 비밀

개인정보의 수집 · 관리 · 이용행위

개인정보 보호법

- 개인정보 (제2조 제1호)

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

-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

계속

민간인 사찰에서 **문제**가 되는 **인권**

4.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권리

- **개인정보 보호 원칙 (제3조)**
 - ① 개인정보처리의 목적이 명확하게 제시
 - ②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
 - ③ 개인정보의 정확성, 완전성, 최신성 보장
 - ④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안전하게 관리
 - ⑤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사항이 공개, 주체의 권리 보장
 - ⑥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
 - ⑦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으로 처리
 -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

민간인 사찰에서 **문제**가 되는 **인권**

4.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권리

1. 민간인 사찰

- (1) 정치적 목적
- (2) 개인의 신상카드작성, 컴퓨터파일 보관

2. CCTV

- (1) 공익적 목적
- (2) 개인의 활동을 감시
- (3) 허용되는 범위
 - 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
 - ② 범죄의 예방 및 수사 ③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
 - ④ 교통단속 ⑤ 교통정보의 수집·분석·제공

감시의 법적 문제들

1. 사인간의 감시 (민간감시)

배우자의 부정을 밝혀내기 위한 감시

기업간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감시

노동통제를 위한 감시

2. 합법적 국가활동에 의한 감시

- 경찰관직무집행법

경찰관에게 범죄의 예방과 진압 및 수사, 그리고 치안 정보의 수집과 작성 및 배포의 권한 부여

- 국가정보원법

국가정보원에게 국외정보와 국내보안정보의 수집과 작성 및 배포에 관한 권한 부여

감시의 법적 문제들

3. 감시의 책임

불법적 감시를 지시한 ‘책임자’ 가 아닌 실제로 감시행위를 수행한 ‘실무자’ 가 처벌 받는 현실

4. 감시의 위축효과

저항하기 힘든 국가에 의한 감시

끊임없는 자기검열

인격체의 주체성 말살 - 타율적 객체로 전락

민간인 사찰과 **권력의 남용** 및 사유화

민간인 사찰은 국가권력의 사유화, 폭력화

민간인 사찰은 민주주의의 적

역감시의 권리

- 국가는 감시의 주체가 아니라 감시의 대상

토론

1. 국가는 왜 국민을 감시하려 하는가?
2. 공익(국가안보, 범죄예방, 수사) 목적을 위한 감시는 항상 허용될 수 있는가?
3. 불법적 감시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?